“고된 노동에도 쉴 곳 부족”…환경관리원 휴게공간 ‘그림의 떡’

궂은 날씨에도 낙엽 수거에 구슬땀
반복되는 청소·민원·불법투기 고충
동·남구 쉼터 각 1곳…접근성 한계
지자체 예산·부지 한계에 확충 난항



5일 오전 10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비에 젖은 채 무더기로 쌓인 낙엽들을 가로환경관리원 정모(49)씨가 빗자루로 쓸어 모으고 있다. /서형우 기자

“쓸어도 쓸어도 끝이 없어요. 여기도 며칠 전에 치운 곳인데 또 낙엽이 쌓였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니까요.”

가을철 떨어지는 낙엽에 가로환경관리원들의 작업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작 이들이 쉴 만한 공간은 부족해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오전 10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월동의 한 도로.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안전모와 마스크,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은 가로환경관리원 2명이 빗자루와 삽을 들고 수북하게 쌓인 낙엽을 수거하느라 분주했다. 도로변 파란색 공사 가림막 아래로는 빗물에 젖은 낙엽이 길게 쌓여 있었다. 가로환경관리원 정모(49)씨가 바닥에 붙은 낙엽을 긁어내듯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모으자 동료인 엄모(49)씨도 삽으로 퍼 올려 노란색 마대에 담았다. 마대는 3분의1가량만 채운 채 입구를 묶었다. 물기를 머금은 낙엽이 무거워져 추후 수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식사·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담당 구역에 따라 작업 인원이 달라져 넓은 구간에 쌓인 낙엽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을철에는 통상 오전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낙엽과 은행 열매 등을 수거한다.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 등 날카로운 쓰레기에 손을 베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정씨의 설명이다.

일을 마치고 쉴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작업 구역과 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정해진 휴식시간에 맞춰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역 가로환경관리원은 ▲동구 41명 ▲서구 56명 ▲남구 50명 ▲북구 92명 ▲광산구 69명 등 총 308명이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는 서구와 광산구에 각각 4곳, 북구에 3곳이 마련돼 있지만 동구와 남구는 각각 1곳뿐이다. 지난 2024년에도 쉼터 부족으로 휴식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씨는 “쉼터가 남구청 근처에 있어 출퇴근 때 집결할 때나, 샤워실을 이용할 때 사용한다”면서 “대촌·송하동 등에서 쉼터로 가려면 이동에만 20-30분씩 걸려서 편의점 등 가까운 곳에서 잠깐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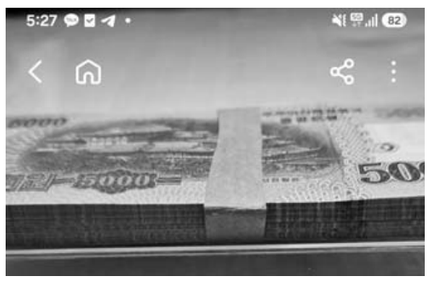
이에 남구는 쉼터와 거리가 먼 곳에서 근무하는 가로환경관리원들에게 휴식시간을 유연하게 부여하는 등 별도의 지원을 통해 과로를 예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쉼터 확충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 쉼터를 설치하기에는 예산·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며 “추가 조성 시가로환경관리원뿐 아니라 인근 공사 현장 근로자 등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와 시설의 실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해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불법투기 계도·단속에도 힘쓰며 현장 근로자들의 고충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북한 돈 팝니다”…온라인 중고거래 주의보

수집·기념용 北지폐 다발째 매물로
판매자들 “경매 구입…반입 서류 없어”
화폐 반입 땐 통일부 장관 승인 필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북한 화폐가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 반입 경위와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거래에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북한 5천원권 지폐 100장을 7만2천원에 판매한다’거나 ‘윗동네 5천원권 한 다발을 4만4천원에 판매한다’는 등 북한 화폐 판매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진〉

판매자들은 해당 지폐를 경매를 통해 구입했다고 밝혔지만, 국내 반입 경위나 정부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북한에서 발행돼 유통됐거나 유통된 적이 있는 화폐를 북한에서 직접 또는 제3국을 단순 경유해 국내로 들여올 때는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국내에 들어온 지폐의 개인 간 거래가 곧바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전남 목포에서도 북한 화폐 판매 글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판매자가 다른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대공 혐의점 없이 종결됐다.

관계 당국도 개별 지폐의 반입 경위와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지폐의 적법한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입수 경위와 경매 낙찰 내역, 반입 승인서나 통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연상 기자

교육청, 나주 모 중학교 학교폭력 조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끼리 폭행·폭언을 반복한 정황이 확인돼 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나주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A군이 지난달 29일 교내에서 체육복으로 동급생 B군의 목을 심하게 졸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이 전교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A군이 B군에게 수개월간 폭행과 폭언을 한 데다, 다른 동급생 3명에게도 폭행이나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4명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과 중이나 후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신고 접수 후 A군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치하고 이달 2일부터 출석정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확한 피해 정황을 조사 중이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출석 정지를 연장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을 분리할 방침”이라며 “학폭위 조사를 토대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 국립의대 추천 효력 항고심…‘국가 소송 의사’ 쟁점

목포대 “시장 추천 처분성 있어” 주장
市 “선정 끝나…집행 정지 실익 없다”
재판부, 양측 추가 심리자료 제출 요청

전남권 국립의과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학교의 선정·추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국가의 소송 제기 의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창훈 수석판사)는 5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비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에서 국가가 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시장의 추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했다.

이에 목포대 측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 위임장 등 요건도 갖췄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요건을 떠나 실제 대한민국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목포대 측은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은 교육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국가사무가 아니라 시장에게 부여된 재량행위”라며 “교육부 심사는 통합시가 추천한 순천대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시장의 추천 행위 자체가 단순 재량행위가 아닌 처분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특별시 측은 “교육부의 최종 선정이 이미 이뤄졌기에 추천 행위에 따른 집행정지에 따른 실익도 없다”며 “추천 행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교육부의 최정 선정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목포대와 통합특별시 측에 3-4일 이내에 추가 심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일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 추천 행위는 교육부의 최종 결정 이전에 행해진 ‘중간 단계’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속력 있는 처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교인 만큼 경쟁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목포대 측이 추천 행위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순천대를 전남권 신설 국립의대 설립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 60명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오지현 기자

